

토론회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의 조건

▶ 일시_ 2013. 1. 21(월) 14:00 ▶ 장소_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최_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한국기술혁신학회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의 조건’ 토론회

“협력으로 혁신 이루는 슈퍼컨설팅트 돼라”

글_임동욱 과총 객원기자 im.dong.uk@gmail.com

박근혜 당선인이 꾸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17부 3처 17청’으로
요약되는 정부조직 개편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참여정부 때까지 존속했던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 전담 부처를 부활시키되 하나로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연구개발 외에도 방송, 광고, 우정, 디지털콘텐츠 업
무까지 총괄해 정부의 핵심 초대형 부처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제1차관, 정보
통신을 담당하는 제2차관 등 두 명의 차관이 배정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도 흡수되
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장관 휘하에 놓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연구개발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대한 업무 분야로 인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이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과 한국기술혁신학회(이하 KOTIS)는 인수위의 확정 발표에 앞선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부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한데 모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인숙 인수위 위원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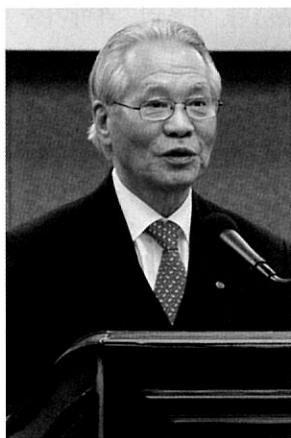
박상대 대과연 공동대표 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 덕분에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탄생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과학기술과 ICT 간의 조정, R&D 예산 배분, 대학R&D 기능 포함 여부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도 과학기술인들의 숙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서 KOTIS 회장 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도 “지식경제부의 응용R&D 기능과 옛 정보통신부 임무까지 편입되는 등 업무나 권한이 과거 과학기술부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거대한 부처를 맡게 될 새로운 수장의 운영철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 현안을 폭넓게 조망하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신설 부처의 성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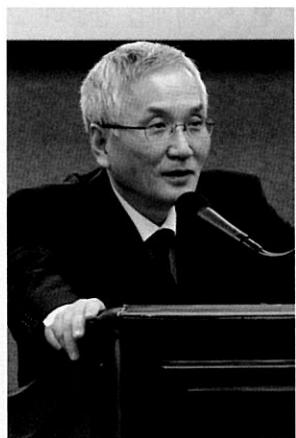
획일화 아닌 다각화 꾀해야 핵심부서 된다

주제발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원장이 진행했다. 이 원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업무를 포괄한다는 결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우선 기대효과로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조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통합적 정보통신산업 진흥 추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기술혁신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고,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이 강화됨으



박상대 과총 회장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박영서 한국기술혁신학회장

로써 혁신 친화적 사회(Inovation Friendly Society)가 앞당겨진다는 점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버넌스가 바뀌면서 기존의 노하우가 상실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과학과 교육의 분리에 따라 대학에서의 연구 지원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했던 종합조정 기능이 사라지면서 산업부처와의 협력이 퇴보할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정책과제와 거버넌스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과제로는 첫째, 행정적 전문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고, 둘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중시하며, 셋째, 혁신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개혁하되 정부 주도적 태도를 지양하고, 다섯째, 정부의 R&D사업을 각 지역과 기관으로 이관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리적 배분구조를 관리해서 공간계획과 과학기술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의 기능 중 흡수할 것과 유지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1차관과 제2차관으로 격리된 조직의 내부 협력을 강화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국과위가 담당했던 종합조정기능을 현명하게 인수하고, 출연연을 미션 중심의 자율체제로 개편하며, R&D사업 관리기구의 구조를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일사분란한 조직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독이 된다”고 지적하며 “획일화를 피하고 관리 시스템을 다각화해야 과학기술 중심의 핵심부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슈퍼파워 아닌 슈퍼컨설턴트의 역할 기대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을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을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모방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했던 경험이 창조경제와 혁신기반경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무를 독차지하는 슈퍼파워가 아닌 얹힌 것을 풀어내는 슈퍼컨설턴트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미래지향적 수장을 선출하고 창의적 R&D를 권장하는 연구생태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상목 과총 사무총장



▶▶ 토론회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서상혁 호서대 교수는 “기초과학이나 공공연구를 앞세우는 대신 산업기술을 등한시하면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여러 기능 간의 융합과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환영할 일이지만 과학은 미래지향적 성격을 떠므로 명칭이 중복적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조직이 반복적으로 개편된다”며 “5년이 아닌 20~30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는 덩치가 커질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늘어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대학 연구 관리는 기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 하에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국가R&D 혁신시스템 구축이 성공을 거둔다”며 “사업 간 연계와 학제 간 융합 등 협력과 시너지의 관계를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학기술 전반을 대표해 되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년 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겪더라도 큰 틀은 유지되도록 핵심기능만으로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CT는 스마트 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혁과 결합해 향후 모든 산업구조를 바꿀 핵폭탄급 분야이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라며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등의 기능은 과감히 떼어내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불릴 만큼 변화와 개혁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구성원들의 공감을 형성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된다는 정책 성공의 원칙 3가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패널토론 후에는 객석에서도 “명칭에 기술이 명시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서 소통을 강화하라”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져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에 따른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ST**